

박 대통령, 우병우 거취 문제만 남았다

특별감찰관 검찰 종료되는 내주 정리될 듯... 자진사퇴 전망 우세... 잔류 시 국정 큰 부담 불 보듯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개각을 단행, 집권 후반기 국정 재정비에 나서면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경현 대표 체제가 출범했고, 정부 부처도 소속이지만 개각이 완료됐기에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 보좌진 정비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종료되는 다음주께 우 수석의 거취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당 지도부 교체에 이어 개각까지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우 수석 거취 문제밖에 없지 않느냐"며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의 사실 여부는 무관하게 그 자체

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도 "아직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기에 앞 일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감찰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지 않는 한 국정 운영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교체 쪽에 무게를 뒀다.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이 종료되는 다음주께 자진 사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바뀌고 개각도 이뤄진 만큼, 우 수석이 현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는 명분을 걸

고 스스로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 이야기다. 이는 이날 내 당·정·청이 새롭게 정비되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지난달 25일 시작돼 이달 말 검찰 종료와 함께 박 대통령에게 그 결과가 보고된다. 물론 대통령 허가 시 1개월 더 특별감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추석 민심과 9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내 결론이 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적으로 특별감찰은 우 수석의 현직 이후 상황만 따져보도록 돼 있다. 민정수석에 오르기 전 이뤄졌던 처가 부동산 매매와 농지보유 문제 등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우 수석이 직무와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

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특별감찰 결과 '문제없음'을 보고 받고 우 수석의 명예를 어느 정도 세워준 뒤 그가 자진 사퇴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 수석이 '그대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기는 하다. 임기 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필수적인데, 우 수석만한 적임자가 있겠느냐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경우 향후 개최될 국정조사와 각종 청문회 등에서 정치권과 여론의 집중타가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그리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 /뉴시스

“우병우가 검증한 사람들로 개각”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발표에 대해 "각종 의혹 속에서 국민과 언론과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은 믿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광은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적식 실종된 개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쇄신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개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쇄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시늬내기 개각으로 비껴가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개각에 포함된 인물은 모두 우 수석 검증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 검증한 사람을 어떻게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과 언론,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야당의 협조와 국정정의 정상적 운영을 요구한다면 어렵지 않겠는가"라면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거듭 박근혜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뉴시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한 주형환(왼쪽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받고 있다.

‘탕평·균형인사’ 요청 이정현 머쓱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4·13 총선 참패 후 처음으로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지만, 닷새 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탕평·균형 인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는 개각이라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각을 통해 문화체육부 장관에 조운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농림부 장관에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을, 환경부 장관에 조경규 현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3개 부처 내정자의 출신지를 보면, 조운선 내정자는 서울, 김재수 내정자는 경북 영양, 조경규 내정자는 경남 진주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정치권의 건의를 드리자면 탕평인사, 균형인사, 능력인사, 소수자에 대한 배려 인사도 조금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호남 출신인 이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내각에 호남 출신 인사들을 좀 더 많이 기용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의 이같은 건의에, 박 대통령은 "말씀 감사하다"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참고를 잘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소속 소속 개각이 그리면서 이 대표가 머쓱해진 상황이 됐다. /뉴시스

양용모 의원 ‘새만금 투자 파기’ 삼성 본사 피켓시위

“세계일류 기업이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

전북도의회 양용모·국주영은 의원이 16일 '새만금 7조 규모 투자 파기' 한 것에 대해 삼성 본사를 찾아 피켓시위에 나섰다.

이날 양용모 의원과 국주영은 의원은 삼성이 세계경기 침체와 투자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MOU체결 5년만에 '새만금 투자 파기' 한 것에 "세계일류 기업이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또 이들은 투자협약 체결 당시부터 논란이 된 협약 체결 과정과 투자무산에 따른 항의서한을 여러차례 전달하려 했지만 삼성측에서 이를 거부했다.

양용모 의원은 "지난 2011년 삼성 새만금 투자 협약 체결 당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랜만의 대형투자

협약에 환영했다"면서 "특히, 도민은 삼성 새만금 투자로 신규 일자리 5만개 창출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너욕이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해 경남 진주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도민의 대형부 반감과 실망이 매우 큰 상황이었지만, 삼성의 새만금 투자는 도민의 아프고 쓰린 상처를 치유하게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세계일류기업과 정부기관이 앞장선 투자협약은 법적 구속력보다 더 중요한 전북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대기업(삼성)과 정부(국무총리실)가 앞장선 투자협약 체결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후속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주영은 의원은 "대기업과 정부가 앞장선 투자협약이 불과 5년 만에 강그리 무시돼 우리의 신뢰와 환영이 깨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삼성의 새만금 투자 파기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력히 피력했다.

또 국주영은 의원은 "왜 투자협약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소상이 알고자 투자협약 체결과정과 여론마음 가져 MOU 논란, 투자무산에 따른 정부와 삼성의 후속대책 등이 국정감사 등에서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16일 삼성본사와 17일 세종시 국무총리실 삼성 새만금 투자 MOU가 규탄 시위, 18일과 19일은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광수 국회의원 면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조운선 전 의원, 문체부 장관 내정

여가부 장관·정무수석 이어 현정부 세번째 요직

조운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현정부에서 또다시 요직을 맡게 됐다. 박근혜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정무수석을 지낸 그가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이다.

그는 지난 2012년 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캠프에서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며 밀착 수행했다. 당시 그는 박 대통령의 옷차림과 말투 등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며 평가를 받았다.

박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인수위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그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첫 내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됐다.

이어 그는 이듬해 6월 청와대 참모진 개

편에서 정무수석에 올랐다. 당시 정무수석에 최초로 여성이 임명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시 조 수석이 새누리당 대변인과 18대 국회의원, 여가부 장관 등을 지낸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면서 박 대통령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지연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무수석을 사퇴하면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어 올해 4월 20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내 경선에서

이혜훈 후보에 대해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조 장관 내정자는 박근혜정부에서 또다시 입각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여소야대 국면을 맞은 박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를 위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 장관 내정자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날 개각을 단행하면서 조 전 정무수석을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개각 발표 브리핑에서 조 장관 내정자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장관 내정자는 법조인 출신임에도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고 '문화가 답이다' 등의 저서를 낸 만큼 문화, 예술 분야에도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뉴시스

‘4대 범죄’ 최다 발생 지역은? ‘제주·광주·대전·서울’ 부산 순... 살인·폭력 늘어

지난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4대 강력범죄는 총 55만2741건이다. 전년도인 2014년 55만8012건과 비교해보면 강도는 1586건에서 1445건으로, 절도는 26만6059건에서 24만5121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살인은 907건에서 919건으로, 폭력은 28만9460건에서 30만5526건으로 늘었다.

인구 1만 명 대비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07.05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인구 98명 당 1명은 4대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1만 명 당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범죄는 폭력(59.12건)이었다. 이어 절도(47.47건), 강도(0.28건), 살인(0.18건) 등이 뒤따랐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는 인구 1만 명당 153.62건의 4대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광주(122.79건) ▲대전(121.46건) ▲서울(121.17건) ▲부산(117.47건) 순을 차지했다.

반면 4대 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이었다. 인구 1만명 당 90.30건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충남(92.11건), 전북(96.65건), 전남(96.75건), 인천(98.10건)으로 강력범죄가 적은 지역으로 꼽혔다.

진 의원은 "지역, 계층별, 성·연령별로 강력범죄에 취약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당 '공공기관 의무 채용 개정 법률안' '전통시장 내 특경건축물 정리법' 발의의 당론 채택

국민의당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통시장 내의 특경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당은 16일 진행된 제16차 의원총회에서 박지일 비대위원장이 지난 10일 전북을 방문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논의했던 두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이번 법안은 김승수 전주시장 등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것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경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지역 출신 35% 의무채용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안제출자인 김광수(전주갑) 의원을 중심으로 보완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광수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현행법에는 혁신도시 지역내채 고용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2015년 12개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내채 고용률이 10%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지역내채 의무 채용법이 통과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정동영 "공시지가 왜곡돼 재벌기업들 납세 특혜"

재벌 소유 부동산이 일반 국민들의 주택보다 공시지가가 낮아 세금 납부에서 특혜를 받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동영 의원은 16일 삼성동 현대자동차 사옥 신축현장을 방문, "세금부와 기준인 공시지가 기준이 왜곡되어 재벌기업들이 납세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4년 9월 한전으로부터 삼성동 신사옥 부지를 10조5,000억원(3.3만평 4억 4,000만원)에 매입했지만 2016년 8월 현재 공시지가는 2조 2,000억원(3.3만평 9,300만원)으로 실제매입가의 21%에 불과해 각종 납세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 의원은 "이 부지 감정가는 거래 직전 3조3,000억원, 거래 직후 5조4,000억원으로 각각 실거래가의 31%와 51%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공시지가가 제도 때문에 우리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용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2011년 삼성에 매각된 한국감정원 부지와 올해 매각 예정인 서울의료원 부지를 둘러보고 "공기업 이전지가 대부분 재벌대기업에게 매각되어 과밀해소라는 공기업 이전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광영 기자

2야, '서벌관 청문회' 정권 경제실세 출석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6일 '서벌관 청문회' 중인 채택에 관해 최경환 의원, 안중범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박근혜 정권 경제 실세들의 출석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확보했으니 증인 채택을 발의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합의는 무효"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박지일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총에서 "그동안 선 청문회, 후 추경을 주장했지만 다른 당의 요구가 있었고 추경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양보했다"며 "이제 정 부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뉴시스